

군사훈련 때문에 친일 논란까지

정진석 '조선은 왜 망했는가' SNS글에 이재명 '식민 사관' 정진석 "진실 호도말라" 진화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친일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역사 관련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식민 사관"이라고 맹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전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SNS 글을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

국을 무력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다"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정부는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맞대응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한반도에 욕일기가 걸릴 수 있다" 또는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강경 노선을 떠나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SNS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제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고종은 일본에 러시아에 미국에 차례로 손을 내밀었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통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은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싶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은 정 위원장의 글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식민사관이라고 맹목했으며 이에 정 위원장은 12일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진

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며 "역사공부 좀 해야한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이 망할 만했으니 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통치한 것이더라는 것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기자회견했다.

또한 박성준 대변인은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편드는 친일 사관을 떠벌였으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망국적인 말을 해 놓고 무얼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한가"라고 맹목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부출가생불환, 집을 나섰으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언급하며 "수많은 순국선열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조상의 얼 앞에서 부끄럽지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홍정윤 기자

국회가 짙은 마약 문제

마약 밀반입... '직구타고 날라온다'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군사우편 밀반입도 증가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각종 마약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육로를 통한 운반책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 직구나 해상 밀수 같은 새 경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해진(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대비 2021년 마약밀수 단속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국제우편 마약밀수는 2016년 대비 건수는 약 3.3배, 중량은 약 12배, 금액은 약 2배 상승했으며, 특송화물 역시 건수는 약 3배, 중량은 약 20배, 금액은 29배나 증가했다.

또 이와 함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또한 증가 추세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되는 마약이 2018년에는 201g이었으나 2021년에는 2291g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음을 짚고 특히 마약탐지견도 감지하기 어려운 대마카트리지가 대다수 적발 사례였음을 밝혔다.

주로 전자담배로 이용할 수 있는 대마카트리지는 외형상 일반 액상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고 냄새 또한 거의 나지 않아 쉽게 단속하기 어려운 고초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조 의원은 "해외

직구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 당국은 추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인력보강도 반드시 해야하고, 약탐지기(이온스캐너) 같은 첨단 과학장비도 빨리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직구 또는 육로 운반책을 통한 밀반입 외에 대한민국 지형이 바다가 삼면인 특성을 이용한 해상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13일 이기호 민주당 의원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단속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 적발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해상 밀수는 주로 공해상의 외국선박에서 밀수품을 단진 후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물품을 건져내는 '던지기 수법'으로, 이는 넓은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마저 용이하지 않고 관련 전문 인력마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계자들은 "마약 밀반입 경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상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고 냄새 또한 거의 나지 않아 쉽게 단속하기 어려운 고초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조 의원은 "해외

홍정윤 기자

'VISION 2026! 인천시의회 비전 선포식'

전국 최초로 완성형 비전 선포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과제 철저하게 준비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인사권 독립에 이어 장장 7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국 최초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의 핵심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2026'이라는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 철학 발전 방향이 담긴 비전·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의정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조직 발전 모델(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비전 선포식을 준비해 왔다.

이에 지난 3월 의회 사무처 비전·전략 추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에 비전·전략 수립을 추진단장으로 3개 반 총 12명의 '비전·전략 추진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사진=인천시의회)

TF(추진단)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전문교육과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했고,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 시민 80%(235만여 명)가 가입한 인천e음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2만547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또 시의원, 인천시·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비전·전략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해외 선진사례 분석,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등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특히 이번엔 발표된 'VISION 2026!

인천시의회 비전'에는 신뢰·소통·협력·투명성·혁신의 핵심 가치와 미션·비전, 3대 핵심 전략이 들어 있다.

3대 핵심 전략에는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지방자치2.0 실현을 위한 전략 중심으로 조직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날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다음 단계인 내년 8월까지의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 본격 시스템 운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인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

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안종삼 기자

인천 계양·서구의원 수당 인상 추진

'주민정서 외면' 지적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가 다른 인접 지방자치단체보다 큰 폭으로 구의원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와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구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각각 7.7%와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치분권 시대를 인천시의회가 선도해 나가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명이 받는 전체 연간 의정비는 3593만원에서 3769만원으로 176만원(4.9%) 오르게 된다.

서구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기존 3936만원에서 4067만원으로 131만원(3.3%) 오른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4%)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계양구와 서구 2곳이다.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의회 등 6곳은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리거나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뉴스)

여의도 소식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절반 법인세 0원

양기대 의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법인 절반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민주당, 광명을·사진) 국회의원이 12일 국제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지난해 법인세액이 0원 법인수는 5356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1만929개 중 절반 가까운 49%에 달하는 수치다.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지난 2017년 7조842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 8조2643억원, 2019년 8조1041억원, 2020년 7조1854억원, 2021년 7조4547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증가와 감



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이 0원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에 한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세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는 1만929개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만449개보다 500개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박용석 기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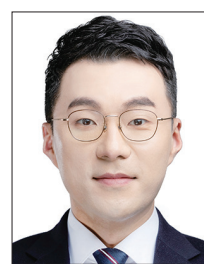
김남국 의원

김남국(민주당, 안산단원을·사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부광산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부광산퇴적암층은 일반 광산과는 달리 공룡 발자국과 다양한 동·식물 화석 등이 발견돼 지난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돼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번엔 확보된 예산으로 수상전망대·탐방로·주차장·관리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대부광산퇴적암층은 우리 안산이 보유한 대표적인 문화재 중 하나"라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와 안산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권, 중국에 장악됐다

김학용 의원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10/11)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현대건설·케이비소프트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쥬레나와 쥬비 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



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용(국민의힘, 안성·사진) 국회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중국태광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략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채종철 기자